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29
----------	------

2025년 9월 8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9월 4일 상정, 보류)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9월 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발행대상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발행금액 : 3,500억원
- 필 요 성 :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 조성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 예정)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합 의: 해당없음
- (4) 기 타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안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보조사업(국비 보조율: 서울 75%)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¹⁾으로 예탁하고자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²⁾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³⁾에 따라

1)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2)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6. 5. 29., 2017. 12. 26., 2025. 4. 1.>
 1. ~ 13. (생략)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 ~ 18. (생략)

3)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채(3,500억원)를 발행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은 ‘재난·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제9조의2⁴⁾에 따른 예수·예탁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요청⁵⁾에 따른 것이며,
-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제4조제2항제4호⁶⁾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2021. 1. 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4)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5) “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관련 안내(예산담당관-9528호, ‘25.8.25.)”

6) **제4조(구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5.16, 2020.7.16>

1. 「재해구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

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예산담당관에서 향후 매 회계연도 상환액 및 이자를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대규모 재난 발생 등 재난관리기금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예탁금을 조속히 반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지방채 발행 목적에 대한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분담비율은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로 서울시는 약 3,5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려는 것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개요(서울시 규모 발채)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전국민 (총 9,130,206명,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 등 제외)
- 지원규모 : 1인당 15 ~ 40만원 ※ 2차 지급 : 1인당 10만원(상위10% 제외)
- (일반국민) 15만원 / (차상위·한부모)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지급수단 : ① 신용·체크카드, ② 선불카드, ③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 소요예산 : 총 2조 2,291억원 (國:市:區 = 75:15:10)

-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이나 재원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 이는 「지방재정법」 제11조7)가 지방채 발행 목적을 ‘공유재산의 조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7.16>

1. 기본법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시의 적립금
2.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해당 현금지원성 사업은 지방채 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8)에 따

7)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 ⑤ (생략)

8)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천적으로 불가함.

- 이에 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¹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¹¹⁾, 조례 제4조제2항제3호¹²⁾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며 지방채

- 9)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2021. 1. 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7. 1. 6., 2020. 4. 2.>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 1. 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6. 11. 1., 2017. 1.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 2. 5., 2017. 1. 6.>

[전문개정 2010. 12. 7.]

발행 목적에 대해 법적으로 별도 제한이 없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 이를 「지방재정법」 제9조의2¹³⁾에 따른 예수·예탁 관련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¹⁴⁾에 근거해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에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이 가능토록 지방채 발행 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각각 ‘25년 6월 24일과 7월 2일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아직 상정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12) **제4조(조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5.16, 2020.7.16>

1. 「재해구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
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7.16>

1. 기본법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시의 적립금
2.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13)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4) 재난·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 예탁 가능

[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22112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	'25.7.2.	서영교 의원 등 10인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 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 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소관위심사
22110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	'25.6.24.	박정현 의원 등 10인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 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 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 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 3호).	소관위심사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접수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에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따라서, 금회 제출된 동의안의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우회적 방편이라 사료됨.

■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규모에 대한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3,500억원이며, 이는 ‘민생회

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시비 매칭분(1,2차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 먼저, 서울시 전체 지방채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서울시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 2조 6,864억원¹⁵⁾ 대비 9월 1일 기준 발행계획액은 1조 9,338억원으로 추가로 3,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¹⁶⁾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표] '2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대비 발행 비율

발행 총한도액* (A)	발행계획액		발행 비율	
	본예산 기준 (B)	3,500억원 추가 발행시(C)	본예산 기준 (B/A)	3,500억원 추가 발행시 (C/A)
2조 6,864억원	1조 9,338억원	2조 2,838억원	71.98%	85.01%

- 금회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기금운용계획 상 수입계획은 당초 1조 423억 25백만원에서 1조 3,923억 25백만원으로 증액되고 이에 따라 '지방채 증권 수

15)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구 분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군·구
총 한 도 액	기본 한도액	【경상일반재원 - (채무잔액 + BTL 임차료 + 우발채무 50%)】 × 10%	
	대도시 특례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별도 한도액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차환액 + 지역일자리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경상일반재원=일반재원-임시적 제외수입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16)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⑤ (생략)

입'이 3,500억원 증액됨과 동시에 지출계획 역시 당초 1조 423억 25백만원에서 1조 3,923억 25백만원으로 '예탁금' 3,500억원이 증액되는데,

- 전체적인 운용규모는 크게 증가되나 증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당초 계획된 202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표]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항	목	당 초	변 경	비고
	수입 계획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기타수입		그외수입	300	300	변경없음
지방채증권		모집공채	0	350,000	증 3,500억원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631,601	631,601	변경없음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380,424	380,424	변경없음
계		1,042,325	1,392,325	증 3,500억원	
지출 계획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재난예방		173,273	173,273	변경없음
	응급복구		20,000	20,000	변경없음
	연구용역		700	700	변경없음
	기금관리비		15	15	변경없음
	여유자금예치		698,337	698,337	변경없음
	차입금원금상환		150,000	150,000	변경없음
	예탁금		0	350,000	증 3,500억원
	계		1,042,325	1,392,325	증 3,500억원

- 참고로, 본 동의안 통과를 전제할 경우, 지방채 발행시기 및 방법이 결정된 이후 지방채 상환계획 및 이자가 확정될 예정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비용을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임.

-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17)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의 예탁에 따른 이자는 국·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으로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종합의견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 중앙정부는 현재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토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 2차 지급일(‘25.9.22.)이 도래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재난·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가능하다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에서 여유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토록 함으로써 도래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우회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 사료되며,

17) 제9조(이자)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민생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회복 마중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금회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안 번호	3129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발행대상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발행금액 : 3,500억원
- 필 요 성 :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 조성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 예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정성민(☎2133-8033)